

국정협의회,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결국 파행

소득대체율 43% 논의키로 했으나 野 “당내서 도저히 받을 수 없어”
추경안 편성엔 조금 진전 있었지만 與 “원점 되돌려... 논의할 수 없어”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만나 국가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회담 결렬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은 “추경안 편성은 조금 진전이 있었다”면서 “추경안 편성을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가 참여하고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서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민

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며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는 소득대체율 43%를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것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며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안 편성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일단 회담은 파행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 협의 회담은 파행됐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3.5%로 절충하되 현재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고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안이 자동조정장치 같은 기능이 있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 내용을 빼면 소득대체율 43%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 시작 전 “국정협의회를 세번째 한다”며 “지난번에 논의한 특위(구성), 추경안 편성,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서 국정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과 민생을 챙기려는 노력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로 인한 민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회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측이 빠졌고 이날 회의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파장으로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성사됐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한 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속’ 관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명희(왼쪽부터) 사회민주당 부대표, 차근규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권택 법률위원장, 진보당 홍희진 공동대표가 10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야5당 공동 고발장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與 “오동운 고발” vs 野5당 “심우정 고발”

〈공수처장〉

〈검찰총장〉

與 “내란죄 수사권 없는데 불법체포 국정조사의 장서 거짓말... 형사처벌”
野5당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 고발檢, 내란수괴 앞에서 비루한 법아귀 댐”

죄 등을 들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 물이’를 목도했다”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다”면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에 심 총장에 대한 야5당 공동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검찰이 불법적으로 무도하게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고 그래서 결국은 내란수괴가 현재 대한민국을 활보하게끔 한 매우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며 “구속 기간 산정은 수사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며 정치권에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야가 10일 각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고발한다”며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 처장을 고발하는 이유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소급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

野 정무위원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 촉구”

금감원 방문... “尹 부부 연루 확인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0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금감원이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특히 100억원대 불법 수익이 은닉되지 않도록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강준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정무위원 10명은 이날 금감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이복현 원장이 삼부토건 관련해 주가

조작을 통한 10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윤석열 정부와 관계된 특정 세력이 연루됐는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는지 분명하게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히 포럼에 참석했다는 발표가 나기 직전 삼부토건 거래량은 4000만주로 40배 늘어났다. 야권에서는 이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시기와 겹친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서예진 기자 syj@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정동영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發 파고 대비 ‘한미의원연맹’ 창립

국회 외교적 역할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파고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초당적 한미의원연맹이 10일 뜻을 올렸다. 올해 한미동맹은 72주년을 맞았지만, 한미의원연맹이 창립된 것은 처음이다. 한미의원연맹은 미국 의회와 교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트

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부과, 보조금 축소 우려에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창립됐다. 한미의원연맹의 회장은 정동영 민주당,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김영배 민주당,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한미의원연맹엔 여야 162명의 의원들이 가입했다. 민주당 소속 98명, 국민의힘 소속 56명, 조국혁신당 소속 5명, 개혁신당 소속 1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입회했다. /박태홍 기자